

1 애플비(Appleby)가 주장한 정치행정일원론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2022 지방7급

- ① 행정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리를 핵심으로 한다.
- ② 행정은 민의를 중시해야 하며 정책결정과 집행의 혼합작용이다.
- ③ 시간과 동작연구를 통한 직무의 전문화는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④ 고위 관료가 능률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정원리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등이 있다.

해설

② 애플비(P. Appleby)는 『정책과 행정(Policy and Administration)』에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정합적이고, 연속적이며, 순환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결합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 정치가 행정에 개입하여 행정의 자의적인 권한을 통제하고, 행정관료들의 공익을 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
 ①③④는 정치·행정2원론과 관련됨. ①은 행정관리론, ③은 과학적 관리론, ④는 Gulick이 제시한 최고관리층의 7대 기능(POSDCoRB)에 대한 내용이다.

답 ②

2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지방7급

- ① 신행정학은 행정의 적실성 회복을 강조한다.
- ② 발전행정론은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 ③ 공공선택론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한다.
- ④ 신공공관리론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유된 가치를 관료가 협상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② (○) 발전행정론은 개방체제적 시각에서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단, 행정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행정의 독립변수성(사회변동기능)을 더 중시.
 ④ (×)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징인 '시민을 위한 봉사(service)'

답 ④

3 민간위탁(contracting ou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지방7급

- 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부문에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 ② 비영리단체는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정부의 직접공급에 비해 고용과 인건비의 유연성 확보가 용이하다.
- ④ 대표적인 예로는 쓰레기수거업무나 도로건설업무가 있다.

해설

② (×) 비영리단체도 민간위탁 대상 조직이 될 수 있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민간위탁(contracting - out ; 계약방식)

의의	정부가 위탁계약을 통해 민간부문에 서비스의 생산을 맡기는 대신, 정부가 서비스 생산 비용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그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는 방식. 정부는 서비스공급권을 전면적으로 민간에게 넘기지 않고, 재원부담책임·감독책임·공적 규제권한을 보유. 서비스 구입자는 국민이 아니라 정부.
사례	공공사업 및 교통사업, 건강 및 대민서비스, 일부 공공안전서비스 등에 적용 예 쓰레기 처리사무의 용역계약, 민영교도소 설치
장점	① 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주체를 결정하므로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인건비, 관리비 등 비용 감축 가능). ② 정식직원을 고용하지 않고도 서비스수준을 높이는 등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제고시켜 관료조직의 팽창을 억제. ③ 민간기업에 의한 효율적 경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정부가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을 상시 보유하는 효과가 있음. ④ 업무량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⑤ 전문인력이 없을 때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외부기관의 신용도를 이용해 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단점	① 민간업체는 공공성보다 비용절감에 관심을 두므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② 노사분규나 민간업체 도산, 안정적 원료 확보 실패 등에 따른 공급의 안정성 문제 발생. ③ 민간의 이윤추구 성향과 계약체결을 위한 비용 등으로 오히려 서비스 공급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④ 외부기관이 집행하므로 집행구조가 복잡해지고 정부의 책임성 및 통제가 약화됨.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 ⑤ 계약과정상 정부의 재량권이 커서 부패 발생 우려, 독점성이 클수록 지대추구와 포획 가능성 커짐. ⑥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비상 상황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 곤란. ⑦ 특정 민간 부분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더 많은 정부지출을 위한 로비 발생 우려.

답 ②

4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책대안의 비용과 효과는 모두 화폐단위로 측정된다.
- ② 분석결과는 사회적 후생의 문제와 쉽게 연계시킬 수 있다.
- ③ 시장가격의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 ④ 국방, 치안, 보건 등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해설

- ① (x) 정책대안의 비용은 화폐가치로 측정, 효과는 물건·서비스 단위로 측정.
- ② (x) 비용효과분석은 주어진 문제나 관할구역 또는 대상집단에 한정되는 등 좁은 안목을 바탕으로 하며 따라서 보다 집중적이고 상세한 검토에 적합하다.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역점을 두므로 보다 단기적인 고려를 수반하며 현행 사업과 관련된 전략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유로 비용효과분석은 분석결과를 사회전체적인 후생의 문제와 관련시킬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 ③ (x) 편익에 대하여 시장가격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사경제부문의 이윤극대화 논리를 따르지는 않는다.
- ④ (o) 비용효과분석은 시장가격으로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공공재나 준공공재에 대한 분석에 더 적합하다.

BC분석과 EC분석

구분	비용편익분석(B·C분석)	비용효과분석(E·C분석)
측정단위	비용·편익 모두 화폐가치로 측정	효과(편익)의 현재가치 계산이 힘들 때 사용. 효과(산출·결과)를 물건·서비스단위로 표현(측정단위 다양)
	비용과 편익을 동일기준(NPV, B/C)으로 비교	비용과 효과(편익)의 측정단위가 달라 동일기준으로 양자의 비교가 곤란한 경우 사용
변화요소	가변비용 또는 가변편익의 문제유형분석 - 비용과 편익이 같이 변화	고정비용 또는 고정효과의 문제유형 분석 - 비용이나 효과 중 하나가 반드시 고정(비용 일정시 최대 효과, 효과 일정시 최소 비용)
적용범위	동등사업 간이나 이등사업 간 비교에 모두 활용	동등사업 간 비교시 사용. 이등사업 간 비교가 곤란
중 점	경제적 합리성에 치중, 능률성 증시	목표·수단 간 기술적·도구적 합리성에 치중, 효과성 분석
시 관	장기분석에 이용	단기분석에 이용
이용대상	양적 분석에 적합	외부경제, 무형적·질적 가치의 분석에 적합(공공재·준공공재에 적용 용이)

답 ④

5 예산의 분류 방법과 분류 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분류 방법	분류 기준
①	기능별 분류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얼마를 쓰느냐
②	조직별 분류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 데 얼마를 쓰느냐
③	경제성질별 분류	누가 얼마를 쓰느냐
④	시민을 위한 분류	국민경제에 미치는 총체적인 효과가 어떠한가

해설

조직별 분류	품목별 분류	기능별 분류	경제성질별 분류
누가 얼마를 쓰느냐? (지출주체)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데 얼마를 쓰느냐? (지출대상·지출항목)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얼마를 쓰느냐? (지출목적)	국민 경제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가 어떠한가?

답 ①

6 정책결정모형 중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대안을 모두 분석하기보다 한정된 정책대안에 주목한다.
- ②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성이 있다.
- ③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인정하므로 급격한 개혁과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혁신적 정책결정을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 ④ 정책결정에서 집단 참여의 합의 과정이 중시되고 목표와 수단이 탄력적으로 상호 조정된다.

해설

- ③ (x) 인간의 인지적 한계는 인정. 기존 정책의 일부 수정방식으로 정책결정이 이뤄지므로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성향이 강하며, 급격한 개혁과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혁신적 정책결정을 설명하기가 곤란함.

답 ③

7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지방7급

-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국가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계획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틀이 된다.
- ②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사전에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각 중앙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 ③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배제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해설

- ① (○) 정부 예산의 단년도 시계를 확장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해당 회계연도부터 5개년 단위의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 재원배분 및 투자계획 등을 제시하는 재정계획으로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제와 더불어 기획기능을 집권화한 제도로 재정운용의 총량목표뿐 아니라 재원배분계획까지 제시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제시.
- ② (○) 총액배분자율예산편성제도
- ③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담당 부처의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이전에 기획재정부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개략적인 사전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 방지,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 등을 하고 다기준 분석방법인 계층화분석(AHP)을 사용하여 종합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실시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치적 영향력에 의한 선심성 사업선정이나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사업선정을 배제하고 대규모 재정사업 예산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고려됨. 경제성 분석과 관련됨.

예비타당성 조사의 수행체계 (건설·토목사업)

기본구상 : 사업계획서		
사업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 사업의 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지역현황, 유사시설 사례 분석, 공학적 자료조사 및 분석, 쟁점 파악 및 대안검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
수요 추정, 기술적 검토, 편익·비용 추정, 비용편익 분석/비용효과 분석, 민감도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의 일관성(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사업추진의지, 사업추진상 위험요인(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사업 특수 평가항목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활성화
종합평가(AHP 분석) : 사업의 추진 타당성 유무, 투자우선순위,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투자시기 및 사업기간, 기타 정책 제언		

- ④ (○)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답 ③

8 현대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 지방7급

- ① 조직군생태론은 단일조직을 기본 분석단위로 하며, 환경에 대한 조직 적합도에 초점을 둔다.
- ② 거래비용이론은 자원의존이론의 한 접근법으로, 조직 간 거래비용보다는 조직 내 거래비용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 ③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독립변수를 한정하고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해 중범위라는 제한된 수준 내의 일반성과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한다.
- ④ 대리인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대칭성과 자산 불특정성이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며, 주인-대리인 관계는 조직 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해설

- ① (×) 상황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조직군생태학은 조직군을 분석단위로 하며 조직의 적응능력을 부정하며 환경에 의한 선택을 강조하는 극단적 환경결정론이다.
 - 상황이론 조직군생태학, 제도이론의 비교

구분	상황이론	조직군생태학	제도화이론
분석수준	개별 조직	중으로서 단위조직(조직군)	조직군
조직행동의 원인	상황으로서 환경의 특성(환경에 적응)	주로 우연	제도화된 사회규칙
변화과정	환경에 대한 수동적 적응	환경에 의한 선택(조직의 적응능력 부정)	사회규칙의 수용(적절성, 동형화)

- ② (×) 조직경제학(거래비용이론, 주인-대리인 이론)은 결정론적 시각의 이론으로 임의론인 자원의존이론과는 다름. 거래비용이론은 조직 내, 조직 간 거래비용 모두 고려.
 - 조직 내 거래비용의 극소화 : U형조직 보다는 M형 조직(조직 내 기능부서 간 거래비용 극소화)
 - 조직 간 거래비용의 극소화 : 거래비용이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클 경우 내부화 전략(수직적 통합),
- ③ (○)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고찰 변수를 특정 환경에서의 적합한 조건으로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조건을 유형화하여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 중범위 이론이다. 추상적인 거시적 이론이 아니며, 조직 내부의 집단·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미시적 이론도 아니다.
- ④ (×) 대리인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성과 자산 특정성이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며, 주인-대리인 관계는 조직 내에서도 나타난다.

대리인 이론에서 합리적 선택과 주인의 통제 노력을 제약하는 요인

- ㉠ 합리성의 제약 : 인간의 인지적 한계, 정보가 부족해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곤란함.
- ㉡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회주의적 행태 : 대리인은 업무수행에 관한 정보를 주인(위임자)보다 더 많이 가지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주인은 대리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 이 경우 이기적 대리인은 노력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음.
- ㉢ 자산의 특성성(전속성 specificity) : 투자한 자산이 고정적·특정적이면 조직 내의 관계나 외부공급자와의 관계가 고착화되고 대리인 관계가 비효율적이 라도 이를 개선하기 곤란함.
- ㉣ 소수 독점이나 과점 :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잠재적 당사자(대리인)의 수가 적으면 불리한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짐.

답 ③

9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지방7급

- ① 내부접근모형에서는 일반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관료집단이 주도한 의제가 정부의 홍보활동을 통해 공중의제로 확산된다.
- ② 동원모형은 정치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사회문제가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되며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 부문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자주 볼 수 있다.
- ③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가 여론을 형성해 공중의제로 전환되며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에서 자주 볼 수 있다.
- ④ 공고화모형에서는 이미 광범위한 일반 대중의 지지가 있는 경우에, 정부는 동원 노력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지지를 그대로 공고화해 의제를 설정한다.

해설

①은 동원형의 특징.

하울렛과 라메쉬(M. Howlett & M. Ramesh) 또는 메이(P. May)의 의제설정모형 - 논쟁의 주도자가 누구인지와, 대중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구분

		대중의 관여 정도(nature of public involvement)	
		높음	낮음
논쟁의 주도자 (initiator of debate)	사회적 행위자 (민간)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on) • 자유민주주의 국가 : 시민집단이 주도 • 민간집단에서 이슈가 제안되고 확산되어 먼저 공중의제가 되고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로 하여금 정부의제로 채택하게 함.	내부주도형(Inside Initiation) •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 : 상당한 전문지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집단 또는 정부집단이 주도 • 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책을 주도하지만 공개적인 논의 확대나 정책경쟁을 바라지 않음
	정부 (state)	굳히기형[공고화형](State Consolidation) • 국가유형과 관계없음. 정책결정자가 주도 • 민간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 정책결정자가 지지의 공고화를 시도해 정부의제와 공중의제로 동시에 설정됨.	동원형(Mobilization) • 일당제 국가 : 정책결정자가 주도 • 대중적 지지가 낮을 때 국가가 주도하여 정부의제화 후 행정PRO나 상징 등을 활용하여 대중적 지지를 높이려 함

답 ①

10 재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지방7급

- ① 국가채무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채무 규모에 상한선을 설정한다.
- ② 재정수지준칙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설정되므로 경제 안정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 ③ 재정지출준칙은 경제성장률이나 재정적자 규모의 예측에 의존하지 않는다.
- ④ 재정수입준칙은 조세 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해설

- ① (○) 국가채무준칙(debt rules) : 은 국가채무 수준의 상한선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로 설정. 국가채무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감독 및 소통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국가채무가 세입과 세출에 따라 발생되므로 직접적인 통제는 불가능하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통화량, 환율, 이자율 등의 경제적 변수들에 영향을 받으므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로만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준칙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② (○) 재정수지준칙(deficit rules or budget balance rules) :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 등)의 한도(균형 또는 일정 수준)를 설정한 준칙이다. 총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또는 관리재정수지)가 목표인 경우 GDP 대비 일정비율 형태로 명목재정 적자비율(balance deficit)을 목표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기 과열이나 침체 등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설정된다. 따라서 예산운용의 결과는 경기순환에 따라 달라지므로, 준칙의 실질적인 효과를 파악하는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경기안정화를 위해 호황기에는 세입증가, 지출감소를, 불황기에는 세입감소, 지출증가를 위한 경기역행적 정책을 실시해야 하지만, 고정된 목표는 경기순환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므로 재정수지준칙은 경기순행적이고 경제안정화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 재정수지준칙이 고안되었는데, 이는 준칙이 복잡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발생시킨다. 준칙이 복잡해지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것이 되고, 다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를 필 요로 하게 된다. 또한 회계 조작이나 지표 왜곡 등으로 인한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재정수지준칙은 예상 재정적자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데, 준칙을 피하기 위해 경제 성장률과 세수입을 높게 전망하면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재정수지준칙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재정균형이 달성되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것도 재정준칙의 단점이다.

- ③ (○), ④ (×) 조세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재정지출준칙의 단점**
- 재정지출준칙(expenditure or spending rules)** : 정부지출규모 증가율 한도를 설정하여 정부지출에 직접 제한을 두는 준칙이다. 전형적으로 3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GDP 대비 지출총액 또는 증가율에 제한을 둔다. 지출준칙은 다른 변수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통제가 가능(경제성장률이나 재정적자 규모의 예측에 의존하지 않음)하기 때문에 과도한 지출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출준칙을 적용하면 지출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출 한도를 초과한 부서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세입측면에서 자 동안정화 장치가 작동하여 경기대응적인 정책기조의 유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통제하는 재정변수가 명확할 경우, 대중들과 시장참가자들에게 설명하기도 쉽다. 그러나 이런 지출준칙도 과도한 재정수지 적자 성향을 완전하게 교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정지출준칙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지출 한도를 준수하는 대신 조세지출을 증가시킬 경우, 겉으로는 준칙을 따르고는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재정수입준칙(세입준칙, revenue rules)** : 세입징수를 증대하고 과도한 조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세입의 상한 또는 하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출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세입규모의 상한·하한 설정은 세입이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지출을 위해 정부가 여유자금(windfall)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식을 취한다. 세입준칙 자체는 경기순행적 정책을 초래하지만 정부규모를 직접적인 목표로 한다.

■ 재정준칙(Fiscal Rule)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로,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정책수단(총량 재정지표의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법제화하여 재정운영에 제약을 가함). 재정건전성지표를 쉽게 관리하기 위한 목표와 지표의 설정. 2021년 기준 105개 국가에서 도입 중이며,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도입 안 됨.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 60%, 관리재정수지 적자 3% 기준 도입 추진 중.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증가율 감소가 예상되어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므로 대규모 재정적자 및 재정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준칙이 필요. 필요성 : 재정규모 결정이 단순해져 재정규율 확립 용이. 이익집단이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재정확대 압력을 방어. 			
구성 요소	① 법적 근거 : 헌법, 법률, 정책 가이드라인, 국제협약 등 효과적 준칙 이행을 위한 재정운영절차, 감독기능, 예외조항 등 ② 수치로 제시한 총량적 재정목표 : 수입준칙, 지출준칙, 재정수지준칙, 채무준칙 등 ③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 사법적·금전적·신용적(정치적) 제재			
유형	구분	개념	장점	단점
	수입준칙(세입준칙)	수입의 최저 또는 최고수준 설정	• 초과수입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 재정건전성에 기여	• 수입준칙 단독으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
	지출준칙	정부지출규모 증가율 한도 설정	• 정부지출을 줄여 재정건전화에 기여 • 단순하고, 감독 용이, 통제가능성 높음	• 재정의 지속가능성과는 직접적 연관성 부족 • 재정건전화 시기에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조세지출 등을 통한 우회 위험이 존재
	재정수지준칙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 등)의 한도 설정	•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적 • 간단, 이해 용이, 투명, 모니터링 용이	• 경기안정화기능 미약(경기순응적), 거시경제 안정성 저해 가능성 존재
	채무준칙	국가채무수준 상한선 설정	•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적 • 단순하고 감독 용이, 통제가능성 높음	• 경기안정화기능 미약(경기순응적) • 최적 부채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곤란

답 ④

1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지방7급

- ① 계급제는 보직 관리 범위를 제한하여 공무원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 ②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무 중심의 동기유발이 가능하다.
- ③ 계급제는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 유리하다.
- ④ 직위분류제는 직무 한계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해설

- ① (×) 계급제는 권한과 책임의 불명확성으로 행정상 조정의 문제를 야기하기 쉬우나 공무원의 시야와 이해력을 넓히는 일반행정가의 특성상 부처 간 수평적 조정과 협조가 용이하다.

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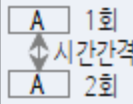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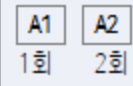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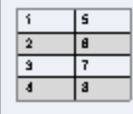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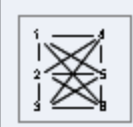
12 선발시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22 지방7급

- ① 하나의 시험유형 내에서 각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하여 시험의 일관성을 검증한다.
- ② 시험성적과 본래 시험으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검증한다.
- ③ 시험을 본 수험자에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하여 두 점수 간의 일관성을 확인한다.
- ④ 문제 수준이 비슷한 두 개의 시험유형을 개발하여 동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한 후 두 집단의 성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해설

②는 신뢰성이 아니라 기준타당도에 대한 내용임
 ① 문항 내적 일관성 검증법, ② 재시험법, ④ 동질이형법(복수양식법)은 신뢰성 검증방법.
시험의 신뢰도 검증방법

재시험법	동일 시험을 동일 수험자에게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 후 두 점수 간 일관성 측정(중적 일관성 측정). 측정 간단. 시험간격설정과 동일 상황 설정 문제는 있음. 검사 시간 간격이 짧으면 측정요인 작용, 길면 역사·성숙요인 작용.	 A 1회 ↕ 시간간격 A 2회 동일시험 2회 실시
동질이형법 (복수양식법)	문제 수준이 비슷한 두 개의 시험을 동일 집단에게 실시 후 두 성적 간 상관관계 측정. 재시험법보다 연습효과·기억효과를 이지만 유사한 유형의 시험 개발 곤란. 2개 시험은 동시 실시(형적 일관성 검증) 또는 다른 시간대 실시(중적 일관성 검증).	 A1 A2 1회 2회 동등시험 2회 실시 (동시 or 다른 시간)
이분법·반분법	하나의 시험 내 문항을 두 부분(홀·짝)으로 분류해 각 부분의 점수 간 상관관계 측정(짝수 항 합과 홀수 항 합을 비교하므로 개별 문항의 신뢰성은 알 수 없음). 재시험법이 부적합하거나 동일 유형의 시험 제시가 곤란할 때 사용. 1회 시험으로 간단히 신뢰도를 계산하지만, 검사의 양분방법에 따라 신뢰도 계수가 다를 수 있음.	 1 5 2 6 3 7 4 8 단일시험 홀·짝 항목
문항 간 내적 일관성 검증법	시험을 두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각 문항 하나하나 간 상관관계를 종합해 시험의 내적 일관성 검증. 개인의 추상적 특성인 성격검사의 신뢰성 측정에 주로 사용. 개별 문항간 상관관계를 검토해 상관관계가 낮은 문항(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제거할 수 있음. 크론바흐의 알파(Cronbach's alpha) 상관계수가 많이 사용됨.	 1 4 2 5 3 6 단일 시험. 문항 간 상관관계

답 ②

13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지방7급

- ① 업무가 비정형적일 때 유용하다.
- ②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③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작다.
- ④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내 전문능력이 있는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구조이다.

해설

③ (x) 애드호크라시는 상하관계와 권한·책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되기 어렵고 명백하게 역할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구성원 간 역할갈등, 책임전가 등으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답 ③

14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지방7급

- ① 다면평정법은 상급자, 동료, 부하, 고객 등 다양한 구성원에게 평정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참여를 통한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개인과 조직 간 목표의 통합을 추구한다.
- ③ 강제배분법은 평정치의 편중과 관대화 경향을 막기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다.
- ④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근무성적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므로 평정자의 편견이 개입할 가능성이 작다.

해설

④ (x) 도표식평정척도법은 등급지정 기준이 모호해 평정이 주관적이며 평정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

도표식 평정척도법 (Graphic Rating Sc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 한 쪽에 평정요소를, 다른 쪽에는 각 평정요소별 우열척도인 등급을 표시한 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평정요소별로 관찰하여 해당 평정등급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 • 장점 : 평가자의 직관과 선형을 바탕으로 하여 평가요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작성이 빠르고 쉬우며 경제적임. 상벌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편리함, 평정결과가 점수로 표시되므로 계량화와 통계적 조정 용이. • 단점 : 평정요소의 합리적 선정 곤란. 등급지정 기준이 모호해 평정이 주관적·임의적(등급의 비교기준 불명확), 연쇄효과와 집중화·관대화 경향, 일반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므로 피평정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 형성 곤란.
---	--

답 ④

15 행정책임 확보 방안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2022 지방7급

- ① 공정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
- ② 부정청탁금지법 제정과 같은 국회의 입법 활동
- ③ 부당한 행정에 대한 언론의 감시 활동
- ④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관리 활동

해설

- 외부통제 : ①③ 민중통제 ② 입법통제
- 내부통제 : ④ 행정통제

답 ④

16 넛지(nudge)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2 지방7급

- ㉠ 넛지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선택설계라고 한다.
 ㉡ 정책대상집단의 행동에 개입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한다.
 ㉢ 넛지는 디폴트 옵션 설정 방식처럼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수단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해설

㉠ (○) 넛지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선택설계(choice architecture)라 한다. 정부는 선택설계자(choice architect) 역할을 수행하며, 전통적 정책수단인 법률과 규제, 경제적 유인 수단(조세, 보조금) 등과 구별되는 새로운 정책수단인 넛지(nudge)를 활용한다. 넛지는 행동경제학이 발견한 인간의 행동 메커니즘을 정책에 응용한 것이다. 선택설계는 선택할 대안이 정책 대상자에게 제시되는 방법과 이를 통해 판단, 선택,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다. 개인의 인지 오류를 이용한 선택설계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환경적 요인(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여 개인의 의지적 판단을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선택설계로 구분된다

㉡ (○)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부는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줌. 개인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개입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개인에게 선택의 옵션을 제공하고, 특정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임.
 • **정부의 개입 대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오류와 행동 편향을 바로잡는 '수단 개입주의'
 • **정부의 개입 수준(강도)**: 물질적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들의 후생을 개선키는 '부드러운 개입주의(soft paternalism)'

㉢ (○) 넛지는 개인의 인지 오류를 이용한 선택설계가 활용될 수 있음.
 • **디폴트 옵션**: 재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기본값(선택적 가입 방식(opt-in)과 선택적 탈퇴 방식(opt-out)). 예) 장기기증의 디폴트 옵션을 '동의'로 정하면, 거절의 의사표시 전까지는 장기기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디폴트 옵션을 '동의 안 함'로 정했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장기기증률이 상승할 수 있음.
 * 넛지이론은 새행정학 3.0에서 추가된 내용으로서 출제가능성이 아주 높으므로 아래 요약 내용을 반드시 알아둘 것

답 ④

<넛지이론(Nudge Theory)> (새행정학 3.0(이중수 외 공저) p.136~145)

개념·대두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의 인간 행동에 관한 행동경제학의 통찰을 정책 설계 및 집행에 적용·응용한 이론. 행동적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관한 규범적 근거와 이에 적합한 정책 수단(넛지)을 제시 행동적 시장실패(behavioral market failure) :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한 불확실성 상황에서 판단·선택을 효율적 수행을 위한 '휴리스틱(heuristic)'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오류(cognitive error)와 행동 편향(behavior bias)으로 인한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행동경제학에서 지칭하는 개념. 정부는 선택설계자(choice architect) 역할을 수행하며, 전통적 정책수단인 법률과 규제, 경제적 유인 수단(조세, 보조금) 등과 구별되는 새로운 정책수단인 넛지(nudge)를 활용. 넛지는 행동경제학이 발견한 인간의 행동 메커니즘을 정책에 응용한 것. 	<p>* 행동경제학 : 넛지의 이론적 근거. 인간 본성에 대한 전통경제학(신고전학과 경제학)의 완전한 합리성 가정의 비현실성을 비판,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경제학에 반영해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성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결정을 유도하는 대안을 제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신고전학과 경제학(전통경제학)</th> <th>행동경제학</th> </tr> </thead> <tbody> <tr> <td>인간관</td> <td>완전한 합리성 완전한 이기성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td> <td>제한된 합리성, 생태적 합리성 이타성·호혜성(사회적 본능, 사회적 선호) 심리적 인간(homo psychologicus)</td> </tr> <tr> <td>의사결정 모델(선택행동이론)</td> <td>효용극대화 행동 기대효용이론(효용할수)</td> <td>만족화 행동, 휴리스틱 전망이론(가치할수)</td> </tr> <tr> <td>연구방법</td> <td>가정에 기초한 연역적 분석</td> <td>실험을 통한 귀납적 분석</td> </tr> <tr> <td>정부 역할의 근거와 목적</td> <td>시장실패와 제도실패 재화의 효율적인 생산·공급</td> <td>행동적 시장실패 바람직한 의사결정 유도(행동 변화)</td> </tr> <tr> <td>정책 수단</td> <td>법과 규제, 경제적 유인 수단</td> <td>넛지(선택설계 : choice architecture)</td> </tr> </tbody> </table>	구분	신고전학과 경제학(전통경제학)	행동경제학	인간관	완전한 합리성 완전한 이기성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	제한된 합리성, 생태적 합리성 이타성·호혜성(사회적 본능, 사회적 선호) 심리적 인간(homo psychologicus)	의사결정 모델(선택행동이론)	효용극대화 행동 기대효용이론(효용할수)	만족화 행동, 휴리스틱 전망이론(가치할수)	연구방법	가정에 기초한 연역적 분석	실험을 통한 귀납적 분석	정부 역할의 근거와 목적	시장실패와 제도실패 재화의 효율적인 생산·공급	행동적 시장실패 바람직한 의사결정 유도(행동 변화)	정책 수단	법과 규제, 경제적 유인 수단	넛지(선택설계 : choice architecture)
	구분	신고전학과 경제학(전통경제학)	행동경제학																	
인간관	완전한 합리성 완전한 이기성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	제한된 합리성, 생태적 합리성 이타성·호혜성(사회적 본능, 사회적 선호) 심리적 인간(homo psychologicus)																		
의사결정 모델(선택행동이론)	효용극대화 행동 기대효용이론(효용할수)	만족화 행동, 휴리스틱 전망이론(가치할수)																		
연구방법	가정에 기초한 연역적 분석	실험을 통한 귀납적 분석																		
정부 역할의 근거와 목적	시장실패와 제도실패 재화의 효율적인 생산·공급	행동적 시장실패 바람직한 의사결정 유도(행동 변화)																		
정책 수단	법과 규제, 경제적 유인 수단	넛지(선택설계 : choice architecture)																		
주요 내용	<p>시스템 I의 사고체계(제한된 합리성)</p> <p>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과 선택 → 휴리스틱에 의한 의사결정 → 인지적 오류, 행동 편향 → 행동적 시장실패 → 넛지 → 사회적 선택설계 → 선택설계자(정부, 공무원) → 개인의 행동변화</p> <p>• 물리적·제도적·사회적 환경 • 개인 선호의 불명확성</p> <p>•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 촉매적 정책수단(간접적·유도적 정부개입) •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한 정책 선택·결정 • 급진적 점증주의 관점(단절적 변화로 보이는 혁신적 변화는 지속적인 소규모 변화의 누적된 결과)</p>																			

행동적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넛지의 특성	<p>①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 정부는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줌. 개인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개입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개인에게 선택의 옵션을 제공하고, 특정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개입 대상 :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오류와 행동 편향을 바로잡는 '수단 개입주의' • 정부의 개입 수준(강도) : 물질적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들의 후생을 개선키는 '부드러운 개입주의(soft paternalism)' <p>② 간접적·유도적인 정부개입방식, 촉매적 정책수단 : 전통경제학에서는 명령지시적 정부규제나 경제적 유인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했으나 행동경제학에서는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위한 다양한 선택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정책수단으로서 다양한 넛지 도구를 제시(예 디폴트 옵션의 조정, 정보와 선택 대안의 단순화, 현저성(salience)과 주목(attention) 효과 제고, 사회적 규범 활용, 정보공개 및 시각정보를 활용한 경고, 기억의 환기, 과거 선택의 특성과 결과 제고 등)</p> <table border="1"> <tr> <th colspan="2">전통경제학의 정책수단</th> <th colspan="4">행동경제학의 정책수단</th> </tr> <tr> <th>규제적 정책수단</th> <th>유인적 정책수단</th> <th colspan="4">촉매적 정책수단</th> </tr> <tr> <td>선택의 제거 및 제약</td> <td>선택의 유도 및 촉진</td> <td colspan="4">선택의 유도 및 촉진, 선택설계</td> </tr> <tr> <td>명령과 금지, 통제</td> <td>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td> <td>정보제공(설득)</td> <td>정보의 단순화와 프레이밍</td> <td>물리적 환경의 변화</td> <td>디폴트 옵션의 변화 사회규범과 현저성의 활용</td> </tr> </table> <p>③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한 정책 선택·결정 : 이론적 토대인 행동경제학의 연구방법 자체가 각종 실험(실험실실험, 자연실험, 무작위통제실험)을 통한 귀납적 분석에 기초함. "정책실험 등의 테스트를 통해 개입 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입 수단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후 개입 수단을 조정하고 적용하는 방법론(test-learn-adapt)"을 개발·활용</p> <p>④ 급진적 점증주의(radical incrementalism) 관점(단절적 변화로 보이는 많은 혁신적 변화가 사실은 지속적이고 부단한 소규모 변화가 누적된 결과로 보는 시각) : 정책 대상집단의 인지적 오류를 보완하여 대상집단의 자율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넛지 방식의 특성을 감안하면 극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나 소규모 변화가 축적되면 기존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혁신적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봄.</p>	전통경제학의 정책수단		행동경제학의 정책수단				규제적 정책수단	유인적 정책수단	촉매적 정책수단				선택의 제거 및 제약	선택의 유도 및 촉진	선택의 유도 및 촉진, 선택설계				명령과 금지, 통제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	정보제공(설득)	정보의 단순화와 프레이밍	물리적 환경의 변화	디폴트 옵션의 변화 사회규범과 현저성의 활용			
	전통경제학의 정책수단		행동경제학의 정책수단																									
규제적 정책수단	유인적 정책수단	촉매적 정책수단																										
선택의 제거 및 제약	선택의 유도 및 촉진	선택의 유도 및 촉진, 선택설계																										
명령과 금지, 통제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	정보제공(설득)	정보의 단순화와 프레이밍	물리적 환경의 변화	디폴트 옵션의 변화 사회규범과 현저성의 활용																							
넛지이론과 신공공관리론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신공공관리론</th> <th>넛지이론</th> </tr> <tr> <td>이론의 학문적 토대</td> <td>신고전학과 경제학, 공공선택론</td> <td>행동경제학</td> </tr> <tr> <td>합리성</td> <td>완전한 합리성, 경제학 합리성</td> <td>제한된 합리성, 생태적 합리성</td> </tr> <tr> <td>정부 역할의 이념적 기초</td> <td>신자유주의, 시장주의</td> <td>자유주의적 개입주의</td> </tr> <tr> <td>정부 역할의 근거와 한계</td> <td>시장실패와 제도실패, 정부실패</td> <td>행동적 시장실패와 정부실패</td> </tr> <tr> <td>공무원상</td> <td>정치적 기업가</td> <td>선택설계자</td> </tr> <tr> <td>정부 정책의 목표</td> <td>고객주의, 개인의 이익 증진</td> <td>행동 변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td> </tr> <tr> <td>정책 수단</td> <td>경제적 인센티브</td> <td>넛지</td> </tr> <tr> <td>정부개혁 모델</td> <td>기업가적 정부</td> <td>넛지 정부</td> </tr> </table>	구분	신공공관리론	넛지이론	이론의 학문적 토대	신고전학과 경제학, 공공선택론	행동경제학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 경제학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생태적 합리성	정부 역할의 이념적 기초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부 역할의 근거와 한계	시장실패와 제도실패, 정부실패	행동적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공무원상	정치적 기업가	선택설계자	정부 정책의 목표	고객주의, 개인의 이익 증진	행동 변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정책 수단	경제적 인센티브	넛지	정부개혁 모델	기업가적 정부	넛지 정부
구분	신공공관리론	넛지이론																										
이론의 학문적 토대	신고전학과 경제학, 공공선택론	행동경제학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 경제학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생태적 합리성																										
정부 역할의 이념적 기초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부 역할의 근거와 한계	시장실패와 제도실패, 정부실패	행동적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공무원상	정치적 기업가	선택설계자																										
정부 정책의 목표	고객주의, 개인의 이익 증진	행동 변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정책 수단	경제적 인센티브	넛지																										
정부개혁 모델	기업가적 정부	넛지 정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용 : 넛지를 통한 정책은 비강제적이고, 정책대상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전통적 수단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임. • 한계 : ① 넛지 정책의 효과는 단기기에 소멸되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행동 변화를 보장하지 못함. ② 넛지 정책은 기존의 정책 수단에 비해 사회적 혁신이라고 부를 만큼의 대규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수단을 대체하는 새로운 수단이 되기 곤란함. ③ 선택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인지적 오류와 행동 편향으로 인한 '행동적 정부실패'의 문제도 제기됨. 																											

17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 지방7급

- ① 스키너(Skinner)의 강화이론은 인간의 내면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행동의 결과보다 원인을 더 강조한다.
- ②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강력한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
- ③ 포터(Porter)와 롤러(Lawler)의 업적·만족 이론은 직무성취 수준이 직무 만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④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이론은 공공부문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의 가치체계는 차이가 없고, 개인이 공공부문에 근무하면서 공공봉사동기를 처음으로 획득하므로, 조직문화와 외재적 보상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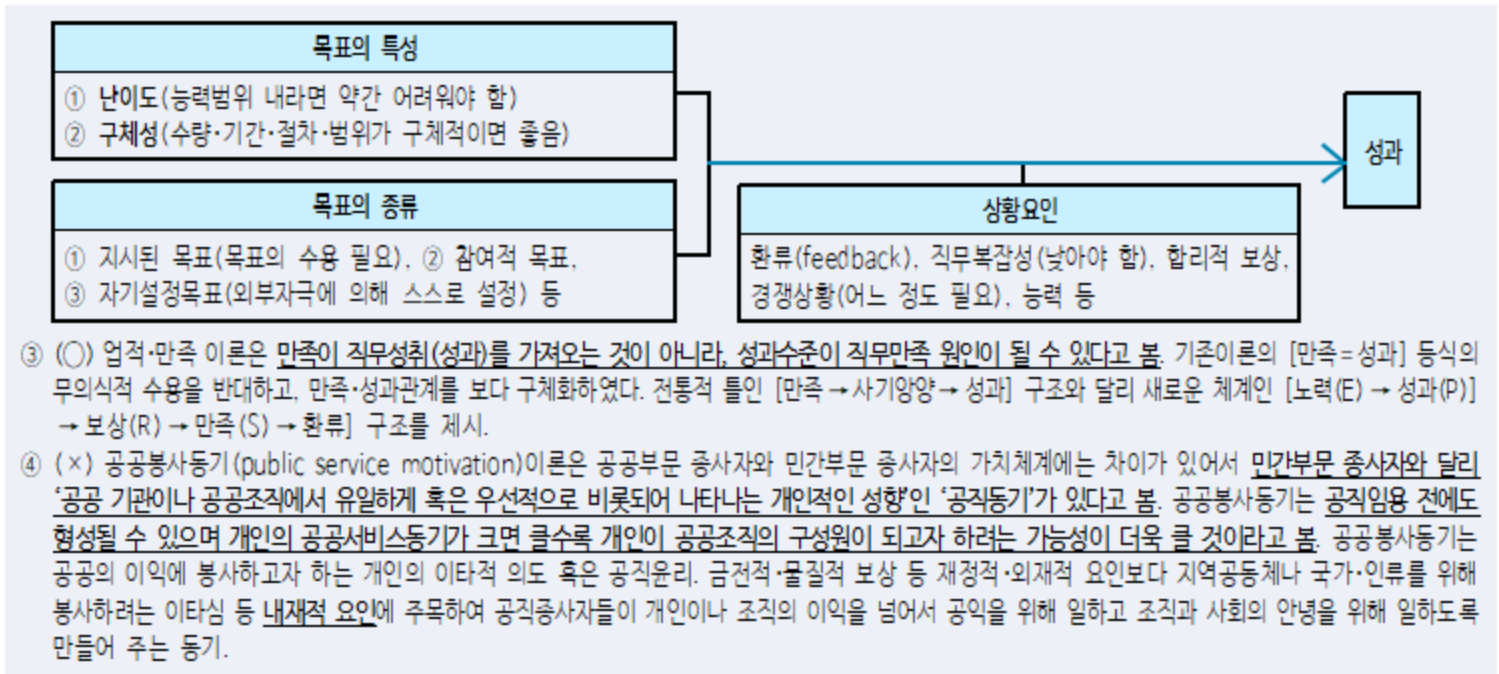
해설

① (×) 스키너(B. Skinner)의 조작적 조건화이론(operational conditioning theory) : 외적 자극에 초점을 맞추며, 행동의 결과를 더 강조. 행동의 결과를 조건화함으로써 행태적 반응을 유발하는 과정을 설명.

선행적 자극	반응	행동의 결과 = 유인기제
업무상황에 처해	조직이 바라는 행동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보강[강화] 처벌·중단]을 제공

을 하면 그에 결부시켜

② (×) 로크(J. Locke)의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 : 목표의 난이도(difficulty)와 구체성(specificity)에 따라 개인의 성과가 결정됨. 구체적인 목표는 인간에게 노력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도전적인 목표(난이도가 높은 목표)는 노력의 강도를 높여줌. "최선을 다하라"식의 목표는 노력의 방향과 강도 중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개인의 성과를 높이기 어려움(예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시도하는 교사보다는 너의 현재 실력이 80점이니 다음 시험에서는 85점을 맞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동기유발 효과가 있음)



답 ③

18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피터슨(Peterson)의 저서 『도시한계(City Limits)』에 따르면, 개방체제로서의 지방정부는 재분배정책보다 개발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 ② 라이트(Wright)는 정부 간 관계를 분쟁형, 창조형, 교환형으로 분류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사회적·문화적 측면의 동태적 관계를 기술하였다.
- ③ 로즈(Rhodes)의 정부 간 관계론은 지방정부가 조직자원과 재정자원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본다.
- ④ 티부(Tiebout)의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성,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외부효과 존재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해설

- ① (○) 피터슨의 도시한계론에 따르면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지방정부는 생산적 노동과 자본을 유입시키는 개발정책을 지향한다. 노동과 자본을 유출시키고, 빈민을 유입시키는 재분배정책은 지양하게 된다. 또한 복지의 자석효과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수준의 격차에 의해 복지수급자의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복지서비스가 좋은 지역에 저소득자가 많이 유입되고, 편익보다 부담이 커지는 고소득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지방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 라이트의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 및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기준으로 정부간 관계를 분리형, 내포형, 중첩형으로 분류.
- ③ (×) 로즈(Rhodes)의 전략적 협상 관계모형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하여 재정적 자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을 제정하는 법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는 현장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현장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재정자원은 중앙정부가 우월한 지위).
- ④ (×) 티부모형의 전제는 외부효과의 부존재.

답 ③

19 정책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 지방7급

- ① 드로어(Dror)는 정책결정의 방법, 지식, 체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책결정체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결정의 개선을 강조하였다.
- ② 정책의제 설정이론은 정책의제의 해결방안 탐색을 강조하며, 문제가 의제로 설정되지 않는 비결정(nondecision making) 상황에 관하여는 관심이 적다.
- ③ 라스웰(Lasswell)은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보다 정책에 필요한 지식이 더 중요하며, 사회적 가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④ 1950년대에는 담론과 프레임을 통한 문제구조화에 관심이 높아 OR(operation research)과 후생경제학의 기법 활용에는 소홀하였다.

해설

- ② (×) nondecision making(= 무의사결정) 상황에도 관심을 둬(신엘리트론)
- ③ (×) 라스웰(Lasswell)은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에 필요한 지식을 모두 중시하며, 사회적 가치를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
- ④ (×) 1950년대 주류이론인 행태주의는 과학적·실증적·경험적 연구방법을 강조하고 정확한 계량화를 중시했으므로 OR(operation research : 운영연구/관리과학)과 후생경제학의 기법 활용에 소홀한 것이 아님.

답 ①

20 탄력세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2 지방7급

- ㉠ 지방세 일부 세목의 세율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조례로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해 표준세율의 50%를 가감하는 방식과 같이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① ㉠

② ㉠, ㉡

③ ㉡, ㉢

④ ㉠, ㉡, ㉢

해설

㉢ (x) 담배소비세나 주행분 자동차세는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가감 가능. 또한 조례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은 일정 비율 가감이 아니라 법정 가감 가능 비율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감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

탄력세율제도(세율결정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적 인정)

의의	세법 상 정해진 세율(표준세율 또는 기본세율)을 법률의 위임에 의해 대통령령 등의 명령이나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해 가감 즉,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991년 지방세법 개정시 처음 도입. 이 중 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세율결정권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과세자주권 확충방안.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으로 가감 :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 지방의회가 세율 가감 못함. ㉡ 조례로 가감 :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소유분),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부동산 등기에만 적용),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방의회가 법률이 정한 일정 범위에서 조례로 세율 가감 가능. * 레저세, 지방소비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재산세는 탄력세율 적용에 일정한 제한을 둠(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가능)

답 ②